

# 한나라당 한농연 대응활동

6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표류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민생현안 처리를 등원카드로 민주당의 압박하면서 단독 국회개원 불사방침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율이 급상승한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비해 국회를 점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한미FTA비준안 처리시도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농연과 한여농은 국회비준을 앞두고 각 시군구 차량집회를 개최하여 정치권에 비준반대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한미FTA 둘러싼 동향

지난 16일 한미 정상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미FTA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입장차이는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설득과정과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준에 부정적이고 한미FTA를 둘러싼 이슈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를 언급함으로써 원문 수정이 아닌 부속협정을 맺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문제'와 '미국의 자동차 관련 상호주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한미FTA에서 쇠고기와 자동차문제를 연계해 선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정부의 긍정적 해석에 대한 확대를 경계했다. 즉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비준시거나 추진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고,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한 외교부 장관도 미국내에서도 한미FTA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아 의회비준이 늦어질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경제위기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친노조 성향인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팽배해 있으나 대통령과 행정부가 이를 최대한 억제하는 상황”

이라고 미국의 통상정책기조를 진단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대통령의 소속당보다 국내외 경제여건과 미국의 산업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데다 미국 헌법상 통상정책권한이 근본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보다 의회의 구성과 입법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에 미칠 중요 변수는 미국의 경제회복속도와 내년 말 중간선거를 꼽았다. 즉 협상 종료 2년이 넘도록 의회의 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한미FTA 역시 지난주 양국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비준시거나 추진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과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조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6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7대 법안과 저지해야 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농업 관련 대응책으로는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대책없는 농어촌특별세 폐지 반대 ▲캐나다 쇠고기 수입반대 등을 6월 임시국회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국의 선통과가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데 유효하지 않으며 연내 미국 의회 비준도 현실성이 없으므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대책 마련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도 현 시점에서 한미FTA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어서 한미FTA비준안은 추후 다뤄질



# 대책 없는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 촉구를 위한 시·군 동시다발 차량 집회 선포 기자회견

인사 · 2000년 8월 27일 / 월 11시 30분 자사 · 그리 부처 아 주처 · 조과 · 하구농업경영이웃안연협회 ·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내용으로 분석된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이 참석했다.



## 한농연 대응활동

한농연은 4차 이사회를 통해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촉구를 위한 시·군 동시다발 차량 집회를 승인하고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미FTA 비준 국면에서 한농연의 반대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이하 한여농)와 공동집회를 실시하였다.

중앙연합회는 22일(월) 오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촉구를 위한 시·군 동시다발 차량집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농연·한여농 중앙임원, 주요 도입원 40여명 참석이 참석하고 민주당 유선호, 김영진, 조배숙, 김춘진, 김영록, 천정배 등 의원과

한농연 강우현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정국 주도권 다툼보다는 농업회생을 위한 핵심과제에 힘쓸 때"라며 350만 농민들의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공동주최인 한여농 장정옥 중앙회장은 "정부는 국민들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듣고 국민과 소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은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한농연과 한여농, 민주당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11시 30분부터 한농연·한여농 참석자들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국이 예상했던 것처럼 한미FTA 진전시킬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고, 민주당은 '선대책, 후비준'이 당론이며, 한농연 요구사항에 상

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자리를 함께 한 이낙연 농식품위 위원장은 한농연이 제시한 FTA와 농업회생을 요구사항은 민주당이 FTA의 선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대책들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농연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FTA의 체결에 앞서 선대책으로 농가부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당의 대책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에 참석자들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비준반대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대표는 한미FTA를 기회로 삼아 농업 발전에 필요한 큰 정책을 얻어내야 하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느 부문에서 피해를 보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농가 부채 문제를 포함하여 테마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이계진 농식품위 의원은 “농협법 개정에 한농연이 지대한 역할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이번 요구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 ● ● 전국 동시다발 차량선전전 개최

예정된 대로 24일 한농연·한여농 회원들은 각 시군구 차원의 ‘한·미 FTA 반대, 농업회생촉구를 위한 시·군 동시다발 차량선전전’을 진행

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정치권에서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보상차원의 소극적 대책이 아닌,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동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한농연 12대 요구사항

- ▶ 농가부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 ▶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된 통상절차법 제정
- ▶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 복무제도 도입
- ▶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 신경분리
- ▶ 농가소득안정제 도입
- ▶ 식량자급률 향상
- ▶ 우리농산물 소비 확대 방안 마련
- ▶ 농어민 재해보상 피해 확대
- ▶ 생산비 인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 ▶ FTA를 통한 수출입 산업의 무역이익 환원 방안 마련
- ▶ 농업회의소 구축
- ▶ 국가 예산 증액에 비례한 농업예산 확보

이날 한농연 집계결과 전국적으로 75개 시군구에서 차량 1,100여대 3,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집회를 성사시켰다. 집회는 도당 앞(혹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내 차량선전전을 실시하고 이후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미FTA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들은 제시한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견제와 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